

<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2002. 5

통 일 부

<목 차>

1.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정상회담	3
가. 통일 환경의 변화	3
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5
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7
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8
2.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9
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9
나.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10
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11
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	12
마. 당국 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 답방	12
3.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의 변화	14
가.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14
나.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구축	14
다. 인적·물적 교류 증대	19
라.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22
마. 북한의 점진적 변화	25
4.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28
가. 남북대화 재개 및 합의 이행	28
나. 북한의 호응 유도	28
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지속	29
라.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30

<부록>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0.1 ~ 2002.4)

1.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가. 통일 환경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의 몰락, 구 소련 해체 등 국제적 냉전 질서가 종식된 후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는 정보화,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냉전체제의 산물인 남북 대결 구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 속에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가 '냉전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느냐,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동참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를 맞고 있다 할 것임.

<북한의 상황 변화>

- 북한은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경제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 직면하였음.
 - 1990년 이후 연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식량·에너지·외화 부족을 겪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도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경제난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내부적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에 북한은 냉엄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타결(1994.10)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접촉하였음.
- 또한 북한은 '무역법' 제정(1998.3)을 통해 무역 활성화, 헌법 개정(1998.9)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음.
 - 관료·학자들을 꾸준히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학습하는 등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 북한의 관료·학자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연수 현황 : 1999년 134명, 2000년 168명, 2001년 511명

<우리의 국력 신장>

- 1970년대 후반부터 벌어진 남북간 국력격차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점차 커져,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해졌음.
 - * 남북간 주요 경제력 격차 : ▲명목 국민총수입(GNI) 대비 약 27배 ▲1인당 GNI 대비 약 13배 ▲무역규모 대비 약 169배(2000년 한국은행 통계)
-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과 장비 면에서는 양적 우위에 있으나, 한·미 군사동맹의 틀과 방위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대북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우리사회의 성숙된 민주 의식과 개방적 사회구조는 한반도 평화 유지,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 민족이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공존, 민족번영,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할 것임.
- * 분단 구조를 지속하는 한 우리민족의 역량 신장에 한계가 있으며, 7000만 민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국제경쟁 속에서 21세기 민족번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

- 남북 분단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목표 >

- ①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
- ②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 ③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 ④ 북한의 변화 유도
- ⑤ 점진적 평화통일 달성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며,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통일정책의 목표와 같은 것임.

-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임.
-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원칙·기조>

-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당시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으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음.
- 현 「국민의 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 통일 불추구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주요 기조로 하여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음.

< 우리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

- 7·4 남북공동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 발표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 : ‘남북의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북한의 유엔 국제기구 참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 20개 시범사업 추진 제의(1982) :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상봉, 설악산·금강산 공동관광지역 개방, 상호 방송 청취, 민족사 공동연구,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등
- 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 남북정상회담·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남북공동사무처 설치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분야의 3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1992) : 남북간 제반 실천 사항을 담은 합의서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1994) : 실무절차까지 합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 기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보완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2000)

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 o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초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였음.(2000.3.9, 베를린 선언)
- o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에 특사접촉을 제의하였고 이 특사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음.(2000.4.8, 베이징)

- 이후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2000.4.22~5.18), 선발대 파견(5.31)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가 이루어졌음.
- o 2000년 6월 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기록을 양산하며, 7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음.

< 남북정상회담 과정의 새로운 기록들 >

- ▲ 서해항로를 이용하여 우리의 국적기가 서울과 평양을 왕복
- ▲ 남북 협력에 의한 TV 생중계 실시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 차량 동승
- ▲ 약 60만 평양 시민의 환영
- ▲ 국내외 300여개 언론사의 1,300여명 기자 취재 등

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o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고 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음.
- o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였음.
- o 아울러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결과이며,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 기반이 강화

2.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의 요지 >

- 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②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③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④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 ⑤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당국대화를 개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함.
 -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7.4 남북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에서도 확인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자주'는 '외세 배격'과 같은 닫힌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하는 열린 개념임.
 - 이는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감안한 것임.
- 이러한 합의는 우리 민족의 장래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 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나.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기로 한 것은
 - 남과 북이 통일방안이나 통일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앞서 과도적 단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남과 북이 당장 통일을 실현하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에 합의한 것임.
- 그동안 북한은 '연방제'안을 통해 당장 완성된 형태의 통일국가 형성을 주장해 왔으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단계적 통일방안인 우리의 '연합제'안에 접근해 온 것임.
- 즉, 남과 북에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연방(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외교권과 군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하자는 남북연합 구상에 접근한 것임.

< Q/A :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은? >

-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는 것임.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함.
-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음.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방안으로, 둘 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헤어져 살아 온 것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이산 1세대가 점차 노령화하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
- 남북 양 정상은 이 같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상호 방문단을 교환키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4차례 4,500명의 이산가족 상봉과 1만여명이 넘는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음.
 - 이는 1985년 남북 각기 40여명의 가족이 상봉한 이래 15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상봉이었음.
- 한편, 우리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도 북측에 촉구 하고 있음.
 -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이전까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상봉, 서신교환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 현황 >

- 1945년 분단과 1950년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납·월북, 탈북 등으로 가족 이산은 계속 증가
- 2000년 말 기준 남한내 이산 1세대는 약 123만명, 이중 60세 이상은 약 69만명으로 추정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 말 기준 약 11만 4천명

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

- 남북간 경제협력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 자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음.
 -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협의하였고, 경험관련 4개 합의를 채택하였음.
- 또한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 2000~2001년 동안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00여명(2,900여건)의 남북접촉이 성사되었음.

마. 당국 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 답방

- 남북 정상은 남북간 합의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음.
 - 이에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임.
- 이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6회)을 중심협약체로 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21차례 개최되어 실질협력문제를 협의하였음.

- 또한 우리측 문화부장관 방북 회담(2001.3), 대통령 특사 방북 회담(2002.4) 등도 이루어졌음.
- 한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임.
- 그 시기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임.

— < 「6·15 남북공동선언」 의 의의 > —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에 직접 합의·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있음.
-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음.
- 남북이 통일을 미래적 과제로 두고 우선 평화공존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인 이산가족문제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이 담겨있음.
- ※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

3.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의 변화

가.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중상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음.
-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음.
-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 경의선 비무장지대 공사 관련 남북군사실무회담 5회 개최,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
- 2002년 들어 9·11 테러 및 미국의 반테러전쟁으로 인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의 자주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한미연합의 전쟁 억지력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
 - 연평해전('99.6.15)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의지와 능력이 확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나.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구축

-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분야임.

- 당국차원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 인프라 구축과 4대 경제협약의 타결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경의선)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음.(2000.9.1)
- 우리는 2000.9.18 경의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 공사를 진행하여 2001년말에 철도 및 도로 공사를 완공하였음.
 - * 2002.2.12 설날에 새로 완공된 임진강역-도라산역 구간 망배열차를 첫 운행, 2002년 5월 현재 경의선 열차가 1일 2회 도라산역까지 운행
 - * 한·미 정상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화 호응 촉구’(2002.2.20)
-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2001.2.8) 되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발효를 지연
 - * 2002.4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시 북한은 경의선 철도의 조속한 연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연결 시기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내부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비무장지대내 공사 소요기간은 철도 3개월, 도로 6개월이므로 향후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대로 공사를 계속할 예정임.

-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과 동해선 연결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 김정일 위원장은 2002.1.6 러 대사관 방문 및 2002.2.10 러 대통령 전권 대표 면담시 시베리아 철도 연결 문제 언급
- * 2002.4. 임동원 대통령 특사 면담시 동해선 철도 연결 문제 언급
- * 동해선 철도는 남북간 연결해야 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증장기적으로 추진될 과제이며, 우선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안 육로 개설이 중요

<개성공단 개발>

- 2000.8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12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00.12 현대측은 개성공단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인 「국제자유경제 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 2001.1.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음.
- 현재 남북관계 소강상태와 함께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 우리측은 개성공단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에 임금·고용·토지임대·세제·송금 등과 관련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중임.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우리 중소기업, 특히 신발·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

- 위치 :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사양산업 300-400개 입주 예정
- 비용 : 공단 건설비용은 약 10억불 내외로 추정
-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 100만평, 1년 소요)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 최근 몇 년간 임진강 유역에서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는 특성 때문에 어느 일방의 치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우리는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을 북측에 촉구, 2000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에 합의하였음.
 - 2001년 2월 평양에서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
- 앞으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임진강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 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 교환과 홍수예보체계 구축, 하천정비, 제방축조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임.
-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이 함께 하는 치수사업으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드는 의미

- 한편, 최근에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진강 뿐만 아니라 북한강 유역에 대한 공동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평화의 댐' 보강 등 홍수방지 대책과 함께 공유 하천의 수자원 협력방안을 북측과 협의·해결할 방침임.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채택>

-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 경협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4개 경협합의서를 채택하였음.(2000.11.11)
- 투자보장의 경우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
- 청산결제의 경우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고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
- 이중과세 방지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배당·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 또한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도 명시
- 상사분쟁해결의 경우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못하고 있음.

다. 인적·물적 교류 증대

<남북 인적 왕래·물적 교류 급증>

-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년간(2000.6~2002.4) 남북간 인적 왕래가 급증,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7,838명이 남북을 왕래하였음.
- * 인적교류가 시작된 '8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13년간 총 왕래인원은 31,782명(북한방문: 30,248명, 남한방문: 1,534명)이며, 그 중 지난 2년 동안 왕래인원이 56%를 차지
- 남북교역액은 2000년과 2001년도에 각각 4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1999년 3억 달러보다 대비 25% 증가했음.
- 위탁가공교역액도 2000년도에 1억3천만 달러, 2001년도에 1억2천5백만 달러에 이르러, 1999년의 1억 달러 대비 25~30%의 증가를 보였음.
- 위탁가공에 참여하는 업체와 품목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

<언론, 문화, 종교 분야 등의 교류>

-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이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음.
- 언론분야에서는 2000년에 언론사 사장단 방북(8월), KBS의 백두산 현지 생방송(9월), SBS의 평양 현지 생방송(10월)이 이루어졌음.
- 2001년에는 MBC의 방북 취재 및 현지 방송(3월), 스웨덴 페르손 총리 방북시 우리측 기자단 동행 취재(5월),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한 KBS의 방북 취재가 이루어졌음.(5~6월)

- 문화분야에서는 2000년에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가 열렸으며 (8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을 북측에 전달하였음.(11월)
 - 2001년에 우리측 창극단의 '춘향전' 평양 공연(2월), 우리측 가수 김연자의 합흥 공연(4월), 이영희의 민족옷 전시회와 패션쇼(6월) 등이 이루어졌음.
 - 또한 동해대학교와 조선기자동맹은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였음.(2001년 6월, 8월)
- 종교분야에서는 2000년에 부활절 남북연합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행사, 2001년에 '부처님 오신 날' 남북동시법회 행사가 개최되었음.
- 한편, 2001년 5월 노동절행사,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7월 남북농민통일대회, 8.15 기념행사 등이 민간차원에서 남북공동으로 개최되었음.
 - ※ 이러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에 대규모 국내 기자단이 동행 취재한 것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
- 이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주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할 것임.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내 북한에 대한 관심 증대 >

- 지난 2년동안 남북 교류·접촉의 증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젊은층을 중심으로 북한 말씨, 노래, 율동, 패션이 유행
 -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 남북 관련 영화에 관객 쇄도
 - 언론사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 북한 정보자료 축적 및 공급 증가 등

<시드니 올림픽 남북공동 입장과 체육분야 교류>

-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였음.
 - 이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와 남북이 한민족임을 전세계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음.
- 국내 체육분야에서도 남북 교류가 이루어져, 2000년에 금강산에서 자동차경주대회(7월) 및 전국체전 성화 채화(9월), 평양에서 통일탁구경기대회(7월) 등이 성사되었음.
 - 2001년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등이 합의되었으나,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 최종 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하였음.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었음.
 - 우리는 북한의 ADB·APEC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고, 북한은 UN 총회 등에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 2000년 10월 제55차 UN 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 UN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
- UN 인권위원회에서도 남과 북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및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하기도 하였음.(2001.4.9)

라.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고통 해소>

-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의 실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임.
-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총 4,5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였음.
 - 1차 : 2000. 8.15~18, 1,170여명 상봉
 - 2차 : 2000.11.30~12.2, 1,220여명 상봉
 - 3차 : 2001.2.16~2.18, 1,240여명 상봉
 - 4차 : 2002.4.28~5.3, 850여명 상봉
- * 제1차~3차 상봉단 교환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루어진데 반해, 제4차 방문단 교환은 북측의 요청으로 금강산에서 개최
- 방문단 교환과 생사·주소 확인을 통해 총 10,213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총 662건의 서신교환도 이루어졌음.
- 한편,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설치 장소에 대한 이견과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면회소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단의 서울, 평양 교차 방문에 대해 부담을 갖고 제4차 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수했음을 감안해 불 때 상설면회소 설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장소에 상설면회소가 설치되어 이산가족들이 보다 쉽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할 방침임.
- * 2001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 박근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동해선 육로 연결 지점에 면회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

- 대북지원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민족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함.
- * 북한의 경제난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도 지원에 동참

< 대북지원과 남북화해협력과의 관계 >

- 남북간 경제적 격차 및 문화적 이질성이 계속 확대된다면 남북화해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물적 지원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은 훗날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하는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한 국가내에서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지역이 후진적이고 저개발된 지역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남북화해협력의 저해요인이 될 것임.

-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지원과 보완적 구도로 추진되어, 농자재 지원, 결핵 퇴치, 삼림 복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은 연평균 8천 3백만 달러로 이전의 연평균 5천만 달러에 비해 60% 증가했음.

- 민간차원의 대복지원은 연평균 5천 7백만 달러로 이전의 연평균 1천만 달러에 비해 5.7배 가량 증대되었음.
- * 민간차원의 연평균 대복지원액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 o 한편,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정부와 민간의 총 대복지원액 4,113억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28억원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2,200원 정도임.
- * 우리 사회내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8조원, 처리비만 4,000억원 소요
- o 우리의 대복지원은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서독의 대동독 지원의 1/30 수준에 불과함.

<서독과의 지원 규모 비교>

구분	한 국	서독	비교
기 간	1995-2001(6년)	1973-1990(17년)	
연평균 지원액	1억 774만불	32억불	1/30

- * GNP 대비 지원규모 비교 : 서독(1980년) GNP 1조 4,720억DM의 0.12%,
한국(2000년) GNI 4,552억 달러의 0.02%
-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대외원조는 국민총소득 대비 평균 0.22%이나, 2001년도 우리의 대외원조는 국민총소득의 0.063%(2억6천6백만달러)에 불과함.
- * 2001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외원조 비율은 ①덴마크 1.1%, ②노르웨이 0.83%, ③네델란드 0.82% 순이며, 원조 총액으로는 ①미국 1백9억 달러, ②일본 97억 달러 순
- * 2001년도 대복지원액 7,045만 달러를 포함해도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외원조 비율은 0.079%에 불과

마. 북한의 점진적 변화

<경제부문에서의 변화 모색>

- 국제적 탈냉전에 부응하여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해 온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건설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고에 의한 실리 추구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정보기술산업을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의 기업과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도입에도 주력함.
- * 김정일 위원장은 2001.1.4 노동신문을 통해 “과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
- * 200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실리 획득을 위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과 정보산업 육성 및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
- 즉, 경제부문에서 개방과 자력갱생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것임.
- *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경제시찰단 파견 및 경험사절단 초청, 개방 관련 법안 마련 등을 통하여 외자유치 및 통상확대 노력
- * 노동신문(2001.1.28)을 통해 “자력갱생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
- 그 결과 북한은 최근 3년간 플러스 경제성장(1999년 6.2%, 2000년 1.3%, 2001년 3.7%)을 지속하고 있음.
- * 이 같은 북한의 경제 회복에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 (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기구 가입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진전이 더디어졌지만,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의 방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통해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음.
 - * 북한은 2002년 4월초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4.27 미국 특사의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음. 현재 미국 정부는 프리차드(Pritchard) 특사 일행의 방북 문제를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북한은 정상외교를 통한 중국(2000.5, 2001.1)·러시아(2000.7, 2001.8)와 우호관계 복원 및 실용적 외교활동을 강화하였음.
 - EU 의장인 페르손 스웨덴 총리 일행을 초청(2001.4) 하는 등 2000년~2001년에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17개국과 수교함.

<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

-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 북한 정치·경제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 대남적화전전략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 대남 군사위협의 감소 등에서 큰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대북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대북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얻을 수 있는 목표이며, 단기적으로 얻어지는 성과가 아님.
- 변화의 속도가 문제일 뿐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단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임.
 - * 예를 들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2월16일 60회 생일과 관련, 백두산 봉우리 수가 216개, 고향집 주변 눈높이가 60cm, 강설일수가 60일이라고 주장

<북한 변화 평가>

- 북한은 기존의 정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부단히 현실주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것임.
 - * ‘신사고’론에 입각한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경제관리에 있어 실용주의적 정책 확대,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 추구
-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우리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변화는 그 환경을 제공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산물이며, 변화의 양적 확대는 점차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본질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최근 북한은 변화에서 후퇴하는 것인가? >

- 북한은 체제 보장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비록 최근 들어 미국 부시 대통령의 강경 입장과 ‘악의 축’ 발언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 의사 발표, 북일 적십자회담 재개 등 대미·일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우리측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나, 2002년 5월 제주도민 255명의 방북, 박근혜 의원의 방북을 수용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
- 결국 북한이 내부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취할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서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우며 체제 유지를 위해 현실주의적 정책과 개방·개혁 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됨.

4.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가. 남북대화 재개 및 합의 이행

- 정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기존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할 방침임.
 - 특사 방북시 합의한 ▲경협추진위원회 개최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임.
 - 이를 토대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5대 과제' 실천에 주력할 것임.
- 서두르지 않고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민족공동체 기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경협 4대 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물적 교류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이라는 원칙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것임.
 -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면회소 설치 등),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나. 북한의 호응 유도

- 북한을 봉쇄하거나,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은 탈냉전의 국제질서하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우며, 북한이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임.
 - 향후 북한의 선택 가능한 변화는 경제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며, 체제 안전이 확보될 때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진전과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의 우려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 이는 남북 모두에 해당하며, 다만 55년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호 호혜적 메카니즘의 형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임.
- * 서독도 동독정권이 체제존립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 동독주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정권 스스로에 의한 변화 추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동독정책을 추진

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지속

-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 반테러 국제 연대라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한·미·일은 고위급 정책조정회의(TCOG) 등을 통해 대북 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일 뿐만 아니라, 중·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적 자세를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함.

라.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우리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추동력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될 때 정부도 대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임.
- 2년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2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의 길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이나 정체국면이 나타날 수 있음.
 - 대결과 불신의 지난 55년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험로가 예상되기도 함.
 -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하면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인내심을 갖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흐름에서 진전되어 나갈 것임.
- 이제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본 틀을 확고히 다져, 앞으로도 이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 의지와 노력을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이념적 · 정치적 갈등 원인과 극복 방안 >

-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과거와 동일하고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으로 이념적 ·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갈등 원인>

- ① 우선적으로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의식과 문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역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의 의식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음.
 -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분출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기도 함.
- ② 한국적 특수상황인 '상황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개념의 혼란'도 그 원인이 되고 있음.
 - 화해협력 · 통일을 내세우면 안보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안보 · 평화를 내세우면 반통일 분자로 매도하기도 함.
- * 북한을 보는 시각 : 동반자(동포) ↔ 위협세력(적)
- ③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비롯된 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조급함도 그 원인이라 할 것임.
 - 대북정책의 성과로서 북한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이 필요함.
 - 남북관계 진전은 장기적 ·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때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④ 남북관계를 민족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됨.

<갈등 극복 방안>

- ① 이념적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임.
 - 6·25 전쟁과 공산당의 피해를 입은 기억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 데올로기와 결부된 남북문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영역임.
 - 따라서 서로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면서 화해와 용서·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란이 극단화되거나 폭력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함.
- ②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19세기말 우리 민족의 국운이 일제에 의해 좌초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 ③ ‘상황의 이중성’과 ‘안보와 화해협력’에 대한 현실적 안목 및 균형 감각이 필요함.
 - 상황의 이중성은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정해야 함.
 - 안보와 평화, 통일과 화해협력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peace-keeping(평화지키기) : 전쟁만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 평화
 - * peace-making(평화만들기) :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
 -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가 필요하며, 남북간 상호 의존구조가 정착될 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할 것임.
 - *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는 정치·군사 위주의 전통적 개념에서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
- ④ 초당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민족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함.
 -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이 되고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받는 길은 화해협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